

정청래 “굳히기” vs 박찬대 “뒤집기”…막판 표심잡기 분주

민주 전당대회 D-1…대의원·권리당원 투표 참여 독려
정 “민심·당심 믿고 가겠다”…박 “대의원 적극 투표 기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8·2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31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을 이길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길 당권은 없다”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직접 대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마지막에 더 간절하게 선거에 임하기 위해 후보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부터 시작한 권리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21.88%로 경기·인천(36.05%), 서울·강원·제주(31.18%)에 못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전체 대의원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이며 정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사실상 전대 선거운동을 진

행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한 뒤 ‘전국 청년 릴레이 지지 선언’에서 세물이에 나선다. 앞선 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에게 밀렸지만, 여론 조사상 청년층이나 여성 지지율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하다는 게 캠프의 판단이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40~50대 주류 당원보다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 역시 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시에 박 후보는 대의원 지지를 최대한 확보해 불리한 판세를 뒤집겠다는 전략을 내세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대의원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 대비 17배인 만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두 후보 진영 사이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정 후보의 인천 당원 간담회에 전원 불참한 인천 국회의원들을 향해 ‘전복질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 후보 측은 당원 간담회는 원래 현역 의원들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與, 방송법 우선 처리

쟁점 법안 본회의의 격돌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에 ‘우선 처리 법안’ 전략을 가다듬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공에 다음 달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이들 법안의 일괄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일단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8월 4일)에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됐다는 데 있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석수(167석)와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까지 더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재적 의원 5분의 3)을 충족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내달 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방송법을 맨 앞에 놓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3법 가운데 1개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방송법 2개와 상법,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순차 처리한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끝나는 내달 6일부터 8월 국회를 소집하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에 열겠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7월 국회 종료 후 곧바로 8월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21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개혁 법안의 속도전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 처리를 2주가량 순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없으면 7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한데 국민의힘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며 “다만 8월 21일부터 처리하더라도 정기국회 전에는 완료하므로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31일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면담 전 구치소 앞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조사실 앓혀도 ‘진술거부권’ 가능성 높아

특검보·검사 1명씩 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를 연달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앓혀나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닢 달 정도(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진우, 정청래·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 10명 제명안 제출

대북 송금 옹호 발언에…정 “우습다” 박 “쇼하지 말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31일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만들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제명 촉구 대상자는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등 10명이다. 주 의원은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사실상 복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북한에 몰래 돈을 갖다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위험성이 있다”며 “유엔(UN)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해 국제 외교 안보에도 고립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제명 촉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SNS) 글을 통해 주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 의원이 제명 결의

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그냥 우습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도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막으려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SNS에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것이 또 이런 것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조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